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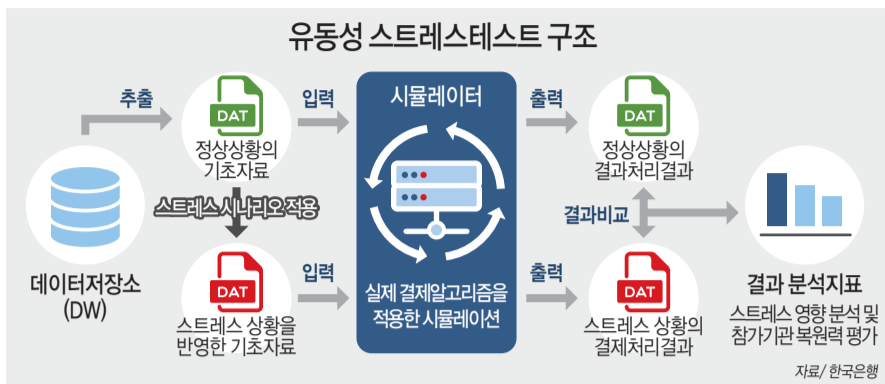
차세대 한은금융망 하반기 가동... 첨단 지급결제 '척척'

2005년부터 한은금융망 구축 시작 점검·보완 통해 시스템 안정화 지속 지급결제시스템, 데이터 감시 활용

한국은행이 금융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참가기관의 자금이체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차세대 한은금융망을 가동하기로 했다.

한은이 25일 발간한 '2019년도 지급결제보고서'에 따르면 한은은 대용량 데이터저장소(DW·Data Warehouse) 기반의 지급결제정보시스템을 차세대 한은금융망에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은의 차세대 한은금융망 구축사업



은 2015년부터 시작됐고 지난해에는 전산시스템 개발이 마무리됐다.

한은 관계자는 "올해 중 내부테스트와 참가기관과 연계한 통합테스트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차세대 한은금융망 가동 이후에는 점검·보완을 통해 시스템

안정화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급결제정보시스템은 ▲실시간 모니터링 ▲지급결제 분석 ▲통계제공 및 운영정보 관리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시스템 이용자들은 지급결제 모니터링 및 분석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한은은

대용량 데이터를 감시업무에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한은은 일중유동성 소진율, 장시간 대기규모 등 결제유동성 관련 모니터링 지표를 추가하고 이상거래 탐지 기능을 신설해 식별된 이상거래를 한은과 참가기관에 알림메시지로 통보할 수 있다. 한은은 한은금융망의 전반적인 리스크 수준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경보지표 상황판을 추가할 예정이다. 또 유동성스트레스 모형을 통해 스트레스 상황이 개별 참가기관과 지급결제시스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참가기관별 복원력 평가도 수행할 수 있다.

아울러 한은금융망, 소액결제망 등

각종 지급결제 통계들의 장기시계열 조회기능을 확충하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계해 사용자의 이용 편의를 제고할 수 있다. 참가기관 현황, 이용수수료, 운영시간 연장이력 등의 정보도 체계적으로 저장·관리해, 원활한 한은금융망 운영 및 참가기관 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한은 관계자는 "차세대 한은금융망에 지급결제정보시스템을 확충해 감시역량을 강화하고 국내외 결제인프라 연계 기반 조성을 위해 국제전문표준(ISO 20022) 도입을 참가기관의 의견수렴, 종합검토를 거쳐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희주 기자 hj89@metroseoul.co.kr

2 실시간총액 결제방식 시스템구축·운영검토

한은, 신속자금이체시스템 첫구축 중앙은행이 직접 구축·운영 증가

한국은행이 실시간총액결제방식의 신속자금이체시스템을 직접 구축·운영할 필요성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2001년 세계 최초로 신속자금이체시스템을 구축했으나 실시간총액결제방식을 중앙은행이 직접 구축·운영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어서다.

한은이 25일 발간한 '2019년도 지급결제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IT 기술의 발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용리스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신속자금이체의 결제방식으로 실시간총액결제를 채택하고 중앙은행이 시스템을 직접 구축·운영하는 국가들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2010년대 이후 신속자금이체를 도입하는 국가들은 대부분 은행간 최종 자금결제가 건별·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실시간총액결제(RTGS)방식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2008년 5월 영국에 이어 스웨덴, 인도, 싱가포르, 호주, 홍콩 등이 신속자금이체시스템을 구축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민간 청산결제시스템 운영기관인 TCH(The Clearing House)가 일부 대형 은행들을 중심으로 신속자금이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시간총액결제방식의 소액결제시스템 'FedNOW'를 2023~2024년에 직접 구축·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신속자금이체(fast payment)는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를 통해 개인·기업 등 지급인의 지급지시와 동시에 또는 거의 실시간으로 수취인에게 자금이 이체되고 연중 24시간 이용가능한 지급결제 서비스를 의미한다.

고객간 자금이체와 인출을 연중 24시간 가능해 해 소비자의 자금이체 편의성이 높아지고 경제주체들의 현금흐름이 원활해짐에 따라 유동성 관리가 용이해지는 장점이 있다.

도입연도	국가	결제방식
2001년	한국	이연차액
2006년	남아공	이연차액
2008년	영국	이연차액
2010년	인도, 중국	이연차액
2012년	스웨덴	RTGS
2013년	터키	이연차액
2014년	싱가포르, 이탈리아	이연차액
2015년	멕시코	RTGS
2018년	호주, 홍콩, 유럽	RTGS
2020년	브라질(예정)	RTGS
2022년	캐나다(예정)	RTGS
2023년	미국(예정)	RTGS

우리나라는 이미 2001년에 세계 최초로 신속자금이체시스템을 구축했다. 2001년 금융결제원을 중계센터로 하는 전자금융공동망이 구축됐고, 2007년부터는 CD공동망에서도 신속자금이체 서비스가 제공됐다.

이후 고객간 거래 결과로 발생한 은행간 채권·채무를 익영업일(오전 11시)에 한은금융망을 통해 최종결제하는 이연차액결제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이 시스템은 지급지시를 받은 수취인의 거래은행은 지급인의 거래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받기 전에 고객(수취인)에게 자금을 선지급함에 따라 수취인의 거래은행은 은행간 차액결제가 완료되기 전까지 신용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한은 관계자는 "미국 등 주요국 중앙은행의 실시간총액결제방식 소액결제 시스템 구축·운영 사례, 도입시 우리나라에서의 장단점 등을 면밀히 분석해 해당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계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에서도 중앙은행이 실시간총액결제방식의 소액결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경우 차액결제 관련 신용리스크 축소, 은행의 담보제공 부담 경감과 함께 향후 국가간 지급결제 시스템 연계 가능성 대비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희주 기자

3 한은, CBDC 전담조직 신설... 이슈 적극 대응

중앙은행 발행 전자적 형태 화폐 법화와 1:1 교환 보장이 특징

전 세계 주요국에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도 CBDC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급변하는 CBDC 이슈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은이 25일 발간한 '2019년도 지급결제보고서'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 2월 CBDC 연구를 담당하는 전담조직 '디지털화폐연구팀 및 기술반'을 신설했다.

CBDC는 중앙은행이 전자적 형태로 발행하는 새로운 화폐다. 이는 실물 형태인 현금과 달리 전자적 형태로 발행되고, 내재가치를 규정하기 어려운 여타 민간 암호자산과 달리 중앙은행의 직접적인 채무로서 법화와 1:1 교환이 보장되는 특징을 가진다.

CBDC에 대한 국제적 논의는 지난해 6월 페이스북이 리브라 발행계획을 발표하면서 확산됐다. CBDC 발행과 관련한 각국의 입장과 대응은 국가별 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연합뉴스

건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중국은행 화폐관리비용 절감과 알리페이, 위챗페이 등 민간 지급결제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 축소 등을 위해 CBDC 발행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중국인민은행은 2014년 CBDC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2017년 이를 연구소로 확대 개편했다. 리브라 발행계획 발표 이후 CBDC 발행 준비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스웨덴 중앙은행은 소수의 민간기업

이 제공하는 전자지급수단에 대한 시장 독점문제와 현금이용 비중 축소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화폐 'e-크로나 프로젝트(e-krona project)'를 진행 중이다.

올해 중 e-크로나를 이용한 결제프로세스 구축 등 기술적 측면의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프랑스는 유로지역에서 선도적으로 CBDC 개발을 위한 연구 프로젝트에 착수할 예정이다. 프랑스 중앙은행은 올해 1분기 '디지털 유로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700개의 섬으로 구성된 바하마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현금 공급·이용이 제약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디지털화폐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바하마 중앙은행은 2018년 6월 자체 디지털화폐(Sand Dollar) 발행계획을 발표했다. 일부 지역부터 시범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 후 전국적으로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일부 국가의 CBDC 발행유인이 미국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행 계획이 없는 상태다. /김희주 기자

4 "현금 없는 사회서도 비상사태 대비 유통 유지해야"

소비자, 지급수단 선택권 보호해야 현금 없는 비상사 가장 신뢰할 수단

'현금없는 사회(cashless society)'가 도래함에 따라 현금 사용 감소에 대해 소비자의 현금 등 지급수단 선택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현금은 비상사 가장 신뢰할 만한 지급수단으로서 비상사태에 대비해 현금을 계속 유통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은이 25일 발간한 '2019년도 지급결제보고서'에 따르면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전자지급수단 이용이 보편화되고 무인점포와 현금 수취를 하지 않는 매장이 등장하는 등 현금 사용 감소가 지속됨에 따라 일부에서는 '현금없는 사회'가 조만간 도래할 것이라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한은의 2018년 경제주체별 현금사용행태 조사 결과 가계의 총지출에서 현금



사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5년 38.8%에서 2018년 32.1%로 감소했다.

ATM은 현금인출뿐만 아니라 계좌이체 용도로도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어 인터넷과 모바일뱅킹에 익숙하지 않은 혁신 소외계층이 주요 활용하는 수단이다. 그럼에도 국내에 설치된 ATM은 2013년 말 12만4200대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감소해 2018년 말에는 11만9900대로 줄었다. 물품 구매시 현금을 사용할 수 없는 매장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금 결제 거부 등 지급수단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는 등 소비자의 지급수단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일정 수준의 현금 유통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신용카드 등 비현금 지급수단은 자연재해, 대규모 정전과 화재, 전산 시스템 장애 등으로 인해 결제 지연과 불능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실제로 지난해 4월 강원·영동지역 산불로 기지국과 인터넷 회선이 타버려 일부 지역에서는 자동화기기(ATM)를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바 있다.

한은 관계자는 "현금은 비상사 가장 신뢰할 만한 지급수단"이라며 "신용카드 이용이 어려워지는 상황에 대비해 일정 수준의 현금을 지속해서 유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희주 기자